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전영평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의의와 추진방향 ····· 1

1. 머리말 ····· 3
2. '국가'와 '민족'으로부터의 해방 ····· 5
3. 동북아 공동체 개념의 차이 ····· 10
4. 문화공동체의 의미 ····· 13
5. 동북아 문화공동체 실천의 가능성 ····· 16
6.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기본 조건 ····· 26
7.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현방안 ····· 31
8. 맺음말 ····· 34

Ⅱ.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 전략, 전망 ····· 35

1.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 37
2. 동북아 문화공동체 논의의 위상과 성격 ····· 39
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비전 ····· 42
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기대효과, 범위 ····· 44
5.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역할 ····· 48
6.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전략 구상 ····· 55
7. 결론: 동북아 공동체의 문화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62

참고문헌 ····· 6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67

그림목차

<그림 Ⅱ-1> 동북아의 '통합시계' ····· 53
<그림 Ⅱ-2> 동북아 공동체 건설 ····· 53
<그림 Ⅱ-3> 한국의 역할 ····· 54
<그림 Ⅱ-4>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협력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 ····· 57

I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의의와 추진방향

김광억(서울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발상은 이 지역 국가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지역 세계(localized communal world)를 형성할 필요성의 절실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지역권의 국가와 민족들 사이의 필연적인 상호 관계는 오랜 과거로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부에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중국과 일본이 주축이 된 주위 국가들이 빚어낸 극적인 역학관계의 소용돌이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배와 반식민 투쟁의 복합적이고 치열한 역사의 전개를 낳았다. 계속하여 이차대전이 끝난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지역에는 냉전체제, 국가와 민족의 분단과 상극적인 반목, 이데올로기의 대립, 내전의 양상을 띤 전쟁과 그에 따른 가난과 폐허, 경제복구와 국가재건 그리고 현대화와 발전 등으로 점철되는 숨가쁜 행보로 채워졌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러한 소용돌이를 겪었고 일본도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여건을 제외하고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

1970년대부터 서서히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구화(globalization)의 거대한 물결 속에 휩싸이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계화'와 '국제화'라는 구호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1997년의 외환 위기는 한 지역이나 나라가 결코 독자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발견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적응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과감한 개방정책을 취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대비한 한국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동북아 시대에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국정의 핵심적인 전략 정책으로 천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이상은 지구화의 추세에 직면한 역대 정부의 일관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다듬어

진 것으로서 특정 정부의 정치적 전략에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21세기의 첫 문턱에서 정보산업과 통신체계 및 교통의 확산에 따라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문화, 그리고 인적 자원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너머서 자유롭게 교류하고 이동하는 현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어떤 민족이나 나라도 고립되거나 자생적인 단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삶의 세계가 이러한 초경계적 확장 속에 놓이게 되는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국가와 민족은 새로운 형태로 정의되고 지역 공동체적 네트워크와 단위를 조성하는 추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주세계가 블록화하고 유럽공동체가 탄생하며 이슬람권역의 국가들은 이슬람공동체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동북아의 세 나라는 각각의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경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거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강대국임에 비하여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국가라는 입장으로 인하여 그 잠재력 발휘에 제한을 받는 작은 나라로 존재한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주위 국가들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공동체적 질서의 건설을 주창하는 것은 한국이 중심적 지위와 역할을 하려는 경쟁심이나 과시욕의 발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존재의 기반을 안정과 번영에 둘 것인가 아니면 긴장과 갈등의 와중에서 모색할 것인가에 관계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질문이다. 즉 한국에게 동북아 공동체적 질서의 확립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 조건과 직결되어 있다. 국가를 넘어선 보다 큰 지역 내에서 나라와 민족들이 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분위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역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와 준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절실하다.

2. '국가'와 '민족'으로부터의 해방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세 나라는 오랜 국가의 전통을 지녀오고 있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과 역사인식이 특별히 강하다. 역사에 대한 기억은 국가와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재생산되고 있으며 국가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발명하기도 한다. 즉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국내적 통합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다.

삼국은 이러한 강한 국가주의에 기반하여 서로 경쟁을 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체제에서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나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전략적 이해관계에 놓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존과 상호 협조를 강조하는 말은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지나지 않기가 쉽다.

진충보국, 국가봉사,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구호들은 오늘날에 와서도 이 세 나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는 이성 그 중에서도 시간적 제한을 너머서는 공익을 위한 최고의 이성을 독점함으로써 국가에 거역하는 것은 이성에 반대하는 음모이자 행위로 의심받고 마침내는 공공의 이름으로 처형된다. 국가 위주의 공교육을 통하여 시민은 그러한 담론에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어서 마침내 개별적이고 그와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시각이 마비된다. 군중 혹은 대중은 그렇게 교육되어 '애국'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이성과 목표를 실천하도록 동원된다.

이러한 정치적 조작이 강할수록 보편적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지성의 입

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직 한 가지 이념과 사상의 틀로서 전체 국민이 획일적 통합을 하도록 강요되고 길들여질 뿐이다. 근대국가의 성립 이래 삼국의 현대사는 그러한 동원된 대중의 폭력과 소수의 지식인 사이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대결과 긴장과 갈등의 경험으로 채워져 왔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자. 연이은 군부 쿠데타와 독재정권은 민족 분산과 국토분단 그리고 냉전체제에 희생된 한반도에서 국민에게 사상적, 물리적, 법적인 통제를 자행하였고 이에 대한 저항은 반민족, 반국가, 좌익, 반동, 파괴주의 등등의 언어로 규정되어 왔다. 그 중에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대세력이란 말만큼 폭력적 규정은 없다. '국가'와 '민족'은 어떤 논리로도 도전받을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지고한 가치관이자 윤리이며 모든 사상과 행위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적 행위는 한국이 식민 지배를 통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파괴당하고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36년이란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식민 지배였지만 일본은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이라는 식민 침탈의 일반적인 행위 외에 한국의 사회제도와 문화전통 그리고 언어와 신앙과 풍습 그리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도 강제적으로 바꾸는 문화말살의 폭력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한국인들은 문화적 아이덴터티(identity)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은 그러한 식민지적 파괴와 상실로부터 국가와 민족과 문화의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 점철되어 왔는 바, 이 또한 식민침략과 지배가 남긴 결과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배의 산물을 역대 정권은 국가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중국 역시 사회주의 혁명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절대적인 국가 권력의 확립에 주력하였고 인민들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애국심을 요구받았다.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광활한 영토(이전의 역대 한족의 제국에 비하여 몇 배의 영토를 확보한 지금)를 하나의 깃발로 묶기 위하여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가장 중요한 정치문화적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

다.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비공산당에 대한 비난도 모두 국가를 위한 것이다. 정부와 당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도 모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다. 국가 권력의 절대화와 무한한 확장은 때로 56개의 민족 간에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적 진압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족정책의 실시로 연결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족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원일체'(多元一體)라는 이념적 구호를 내걸고 '중화민족'이라는 포괄적인 새로운 민족 범주를 발명하고 있다. 곧 중국의 정치적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中華)를 구성하는 민족이며 이들의 문화와 역사도 모두 중화 역사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정책이 다양한 정치적 전략으로 동원된다. 언어에 있어서도 이전의 모든 소수민족의 언어도 한어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중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민족이 한어를 사용함으로써 '중화민족'으로서의 통합을 완수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즉 소수민족들이 사용가치가 극히 제한된 고유한 언어에 집착함으로써 문화적 게토를 만드는 것을 벗어나서 한어를 일상화하여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국민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언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없어지고 당분간은 오직 자체적으로 고유한 민족 언어를 보호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 아마도 조선족처럼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자체적으로 보존할 능력이 있는 집단을 제외한 다른 소수민족은 그 언어를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는 상실이나 파괴가 아니라 '중화민족'으로서 다시 태어나며 한족과 동등한 자격의 공민으로서 국가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과 국가의 막강한 통제력 앞에서 한족(漢族) 지식인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암묵적인 동조를 하도록 요구된다.

일본은 어떠한가?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가장 서구화 되고 현대화 된 국가로 간주된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와 접촉하였고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하여 식민지배까지 하였으며 세계대전의 주역국이었다. 전후 아시아 전체가 내전과 폐허와 국가 재건의 혼란 속에 있을 때 일본은 더욱 서구에 개방적

인 자세를 취하고 서구적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성취하였다. 따라서 전후 세대 그리고 특히 1970년대 이래 새로운 세대는 일본적인 것을 탈피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은 아직도 일본인의 생각 저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새로운 세계 즉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자처한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대륙세력에 대하여 경쟁적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이 물질적인 생활에서나 라이프 스타일이 서구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국가중심주의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일본적 전통과 일본문화의 정체를 더욱 강화하며 패전과 함께 좌절되었던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추구한다.

세 나라 모두 진보와 발전 또는 선진국을 향한 목적을 위하여 경제와 과학기술을 절대적으로 중시하였다. 국가의 수요에 의하여 지식이 서열화되고 따라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세계를 보는 눈이 결정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이웃 나라나 세계의 민족 집단을 소위 과학 기술의 수준이나 경제 수치에 의하여 등급지어서 이해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식민지적 왜곡과 폄하 그리고 그에 대한 반감 등이 상호 작용하여 서로를 부정적으로 왜곡하였으며 이러한 왜곡된 모습은 전후 국교 정상화가 미루어진 채 냉전체제에 의하여 계속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왜곡된 지식으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된 세 나라 사이의 정치 및 경제적 교류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란 한국과 일본 뿐 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공히 적용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래 이들 국가에서 진행된 문화적 변동 양상은 국가 사이에 오해와 편견과 경쟁심으로 구축된 장벽을 깨뜨리고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민중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던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민중적 자생

력의 가능성을 믿게 만들었다. 오직 자기의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던 일국주의(一國主義)를 벗어나서 지역과 세계에 대한 지평을 열고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와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다는 신념을 증명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압력이나 국가의 폭력 속에서도 시민적인 힘의 성장이 가지고 오는 희망적 현실을 보는 눈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동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경험은 바로 탈경계적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였다. 젊은 세대들의 문화소비 형태는 국가나 민족의 제약이나 장벽을 넘어서 확산되고 일상화 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되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류(韓流), 일류(日流), 합한족(合韓族) 등의 이름으로 유행했던 대중문화 소비의 확산 물결은 국가와 민족이 삶의 의미를 실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계를 넘나들 때에 오히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1980년대부터 시작된 대중적 관광교류의 증대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관광에 참여하기 시작한 중국인들에게 이웃 나라와 이웃 민족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인상이 얼마나 편협한 정치적 시각에서 왜곡되었던 것인지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우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화적 교류와 소비는 사람들에게 상대방 국가와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이전의 편견을 수정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충격적인 즐거움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로 생활공간이 국가 바깥으로까지 더욱 넓어지고 교통과 통신의 망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소한 일상의 세계와 경제활동의 영역도 세계적 체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지역간의 국제관계나 경제협력과 거래 관계 뿐만 아니라 1997년의 외환관리가 가져 온 경제위기는 더욱 세계적 안목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체와 정부는 국제적 접촉과 거래에 있어서 문화적 이해와 친근감이 소위 국가와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감정적인 반응을 결정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국가들이 공동체적 협력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알력과 경제적 경쟁 그리고 군사적인 갈등을 너머선 문화적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한 가장 실현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에서 문화의 생산과 보급 그리고 소비와 수출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문화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하드웨어인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발명하는 것이 문화이지만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큰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힘도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와 군사 면에서의 경쟁보다는 협력이, 그리고 승패를 겨루는 전쟁의식보다는 평화적 상생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도 문화이다.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됨에 따라서 동북아 지역을 이러한 문화적 공동체로 만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3. 동북아 공동체 개념의 차이

그러나 동북아 지역 공동체라는 말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생소한 단어이다. 중국은 애초부터 '중화세계'라는 세계관을 견지해 왔으며 일본은 '동북아'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적이 없는 듯 하다. 일본은 과거에는 '대동아공영권'이라 하여 일본이 중심 혹은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영향력이 아시아에 미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하려는 성향을 '동아시아'라는 말로써 표현하였다.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그들은 동북이란 말 대신에 북동이라 한다.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2003)에 의하면 일본은 원래 탈아입구론을 주장하였다가 일본(식민조선을 포함) 지나, 만주를 일본의 지배적 영

향 아래 하나의 단위로 묶는 이상을 표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 하였으며 이를 확장하여 동남아의 여러 나라까지 일본 중심의 세계질서 체제에 묶음으로써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개념적 공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2차대전의 주역국으로서의 정당성을 꾀하였다. 전후(戰後) 패전국 일본은 그들을 패전시킨 미국과 환태평양권을 설정하고 그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을 중시한다. 이는 탈아입구론의 현대적 재판(再版)으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삼아 중국 중심의 대륙으로 진출 또는 대립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 세계관을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란 중국의 동북 3성이라 하는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아우르는 고대 만주지역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공동체는 중국의 규모보다 작은 곳이다. 중국은 그 대신에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대만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주변의 화교 및 화예(華裔) 중심의 국가와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화교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국경이 없는 혹은 국경을 넘어선 범세계적인 중화제국을 형성하려 한다. 여기에는 과거 제국시대에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엮었던 조공체제를 현대적으로 부활하는 움직임도 들어 있다. '중국'이란 영토와 구성 민족이 일정하지 않고 긴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확장과 축소를 되풀이하는 가변적인 공동체이며 상상적인 공동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중국은 대륙에 자리를 잡고 막강한 국력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도권을 둔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주위의 동남아 국가들을 연대하여 이제 태평양을 행하여 그 세력의 확장을 시도한다. 이러한 성향은 일본의 대륙진출 성향과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동북아시아는 국가 중심의 정치적 공간 개념 외에 민족적 연대로 이루어지는 공간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탈경계적 민족 네트워크 형성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이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족뿐만 아니라 영토주의에 기초하여 영토의 변화에 따라 모든 민족 집단을 중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으로 규정하면서 세계에 산재한 한족의 후예(화예 혹은 화교라

고 부르는)를 모두 중화민족 혹은 중화제국의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범세계적 탈국경적 중국을 형성하려 한다. 실제로 이들 해외 화교의 경제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화교에 애한 준공민적 대우를 하면서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한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소위 조선족과 재일한인, 중앙아시아와 사할린, 미주의 한인 들을 연결하는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하여 특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그래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정을 간섭하며 민족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일본 역시 미주에 있는 일본인 2세와 그들의 후손들을 망라하는 일본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재일 한인이나 재일 중국인에 대해서는 차별정책을 쓴다. 이러한 탈경계적 민족 집단의 규정은 세계화의 추세에 힘입어 전략적 자원으로서 더욱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긴장과 알력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태평양 공동체주의 및 탈경계적 민족 네트워크의 경쟁적 구축이라는 현실적 맥락 속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이상은 별로 호소력이 없다고 하겠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감한 정치적, 군사적 사안이 되어 있고 이와 연결되어 각국의 경제 진출을 둔 경쟁과 견제가 존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체제는 언제나 관심꺼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사국들이 동북아 공동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의 권역과 경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자체의 규모로서 이미 공동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일본은 1.3억의 인구와 372,313km2의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경제와 군사 면에서 세계적 대국의 위치를 누린다. 중국은 13억 인구와 대만을 제외하고도 9,596,961km2의 영토를 가진 초대형 국가로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며 핵보유국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경제 등의 면에서 초대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4.7천만의 인구와 99,656km2의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2.2천만 인구와 122,762km2의

영토를 보유한다. 남북한을 합쳐도 인구와 영토에 있어서 소국이며 남북한을 합치면 그 경제력이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진다. 그나마 분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역의 나라와 민족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작은 나라이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경제적 구조의 차이는 세 나라로 하여금 정치적·경제적 공동체를 주장하는 외교적 차원에서는 목소리를 함께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서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 나라 사람들이 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다. 문화적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존의 지혜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이야말로 가장 동북아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지역의 국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공동체는 따라서 중화제국이나 태평양 공동체와는 달리 팽창주의나 지배력을 둘러싼 경쟁적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적 시도이며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4. 문화공동체의 의미

문화는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사회 성원이 공유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 혹은 양식으로서 사회적 제도들과 세계관, 가치, 윤리, 사고방식 등의 체계이다. 이로써 사람다움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민족이나 사회 사이에 특징이 생긴다. 곧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한 인간상은 문화로 정의된다.

공동체란 흔히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듯이 말해지기 쉽다. 곧 언어, 관습, 풍습, 사회적 제도, 역사인식,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로서의 한 사

회 안에서는 성원들이 신분제, 계급과 계층, 지역, 개인적인 종교와 신앙 등이 서로 다르면 이에 따라 취향과 이념적 정향, 심지어 생활방식과 제도에 있어서 반드시 같다고만 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지구상에 동일 혹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별로 없다.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이 각각의 문화적 특성을 지닌 채 하나의 국가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통합이란 문화의 공통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화의 공통성이 사회적 통합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실제로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단일민족에 대한 관념이 강하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들의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동일하다. 한국이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라는 점도 이념이나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로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미 북부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 있으며 오키나와의 사람과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의 사람들 사이에도 일종의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민족적 동질성은 상상의 공동체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란 내부적인 이질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생각에 의하여 서로를 인식하고 자기들의 세계를 정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민족이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식과 매체를 통하여 서로 동일하다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의 집단 혹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듯이 여기는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는 지적이 있는바,[1] 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여하한 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민족적 차원에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때에 동질성에 대한 상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많은 상징들이 동원된다. 즉 공동체는 상징적으로 구축된 세계인 것이다.[2]

한편으로 문화는 생산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재이기도 하다. 일

---

[1] Benedict Anderson, *The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83) 참조.
[2] Anthony Cohen,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Tavistock, 1983) 참조.

상의 생산 활동 영역과 구분되면서 취미와 오락 혹은 교양 활동을 위한 생활 영역을 예술과 대중문화라 일컫는 분야를 또 하나의 차원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이 예술과 대중문화는 즐기는 소비재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통한 교류와 소통과 이해를 실천하는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통하여 가보지 않은 나라와 사람에 대한 인상을 갖게되고 그에 따라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지식을 수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친근감과 마침내는 그 문화의 일부를 경험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타결이나 경제 협력으로도 이루기 어렵던 상호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화가 외교와 경제 영역의 하나로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논리도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른 행위와 그에 부여되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예술과 대중문화 등 문화상품의 향유를 통하여 감정적인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문화를 즐거운 세상을 만드는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의 정의에 의한 문화가 국민이나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이해를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 후자의 대중문화나 예술은 한 사회 내의 세대와 계층 혹은 계급적 다양성을 다이나믹하게 이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그리고 관행을 지니면서도 상호 존중과 의존의 필요성에 의하여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체로서의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면 그것이 내적 이질성을 가진 공동체이다. 이는 혈연이나 종족 집단이 아닌 문화적 공동체라고 한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로 동화(assimilation)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를 위하여 공존하는 통합(integration)되는 공동체의 진정한 원리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거대한 지역적인 문화공동체

를 이룩해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이 지역의 나라와 민족 집단이 각각의 고유한 전통을 가지면서도 상호 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거대한 상호관계의 얽혀지는 생활세계를 이룩한다는 의미이다.

5. 동북아 문화공동체 실천의 가능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공동체는 쉽고 간단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세 나라를 포함하는 소위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논할 때는 의례히 한자 및 한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한자문명과, 사상적 바탕으로서의 유교전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에 덧붙여 체질적인 근접성과 민속의 상사성(相似性)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된다. 생활에 있어서도 일년의 절기와 민속 혹은 풍속에서 비슷한 점이 많으며 체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면서 서로 닮은 점이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만나면 특히 서구와 같은 낯선 땅에서 서로 만나면 즉각적인 동료의식이나 친근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세 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서로 친한 친구가 많고 설혹 친구가 아니더라도 첫눈에 배타적이기보다는 친근감을 느끼는 편이 더 많지만 집단적인 수준에서 특히 국민 혹은 민족의 맥락에서는 그러한 친한 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국가에 구속되는 정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주의와 민족이라는 원초적인 감정(primordial sentiment)에 쉽게 함몰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몇 가지 문명이나 문화적인 상사성(similarity) 혹은 공통성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적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공통성은 오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 과정의 특정 시기에서 보이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현실인 경우가 많으며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랬다고 해서 현재

에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자는 이미 한국에서는 최근에 한글전용 정책을 취하면서 이미 40대 이하의 세대들에게는 한자는 어렵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아니다. 언어로서의 중국어는 원래부터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아주 낯선 외국어가 되어 있다. 오히려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서 일상의 대화에서 영어가 자주 사용되며 길거리의 간판이나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어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의 사람들 역시 이웃하는 나라의 언어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관이나 윤리관을 이루는 사상적 바탕으로서의 유교에 대한 평가 역시 엄밀히 말하여 옳다고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학문영역으로서의 유학은 주자학에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중국에서 다양하게 분기(分岐)한 여러 학파의 해석과 철학은 별로 통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말하는 유교문화의 요체는 교육과 지식의 중시, 관료와 학자의 사회적 신분이 특권적으로 우월하며 사농공상의 순서로 배열된 직업과 신분제도의 관계에서 보듯이 상공업을 천시하는 직업관, 그리고 가족제도에서의 부계 종법체계 등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상업도 중시하였으며 문(文)뿐만 아니라 무(武)의 전통도 강하였다. 요컨대 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신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 사람들의 일상세계에 가장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세계관이며 행위규범은 도교적 전통의 것이다. 그러한 전통 위에 불교문화가 있으며 유교적 전통은 계급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가족주의적 성향 그리고 효도를 강조하는 윤리체계 등으로 표현되고 인식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고대 샤머니즘의 하나인 신도(神道)가 종교적 바탕이 되고 있다. 비록 도쿠가와(德川)의 지배 기간에 유교전통이 일본의 관료제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체계를 성립하였다는 연구가 있지만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신도와 세속적인 불교이다. 일본에서는 종법(宗法)체계나 부계(父系) 상속에 의한 가족계승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성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이나 계승에 따라 성씨를 쉽게 바꾸고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무(武)의 전통이 문

(文)보다 우월하여 무사(武士)가 엘리트가 되며 상업이 일찍 발달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만이 불교와 샤머니즘적 바탕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이 지배 문화의 위치를 강하게 점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이 세 나라에 모두 있다고 해서 그 실천의 양상과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가족구조와 제도에 있어서도 일단은 유교적 가족주의가 선호되고 부계혈연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상속의 법칙이나 가계 계승의 원리나 제사의 방식과 족보와 종족(문중)의 조직 방식과 원리 등에 있어서는 서로 판이하다. 세 나라 사이에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인간관계의 연망을 형성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존재, 역사적 인식과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의 유교적 문화 전통에는 그들이 중시하는 덕목과 도덕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인(仁)과 예(禮)가, 일본에서는 충(忠)이 효(孝)를 능사하며, 중국에서는 덕(德)과 인(仁)이 강조된다. 남녀 및 세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정의도 다르며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의리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명분에 의하여 정의된 의리관계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 죄의식이 없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도교의 세계관에 의하여 역시 죄의식보다는 인간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다양한 비법과 방식이 모두 일단 인정되는 도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이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라는 평가는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죄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물론 신 앞에서의 원죄사상을 갖는 기독교와 달리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자각에서 오는 죄스러움이다. 어쨌든 세 나라 사람 중에서 한국인이 도덕적인 구속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역사전쟁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였듯이 세 나라 사이에는 역사인식과 역사해석에 있어서 커다란 간격을 보여 왔다. 식민주의 침략과 지배에 관계된 강제 징용의 보상 문제와 종군위안부나 남경(南京)학살 등

을 포함하는 인권 문제와 문화재 소유권이나 반환의 문제, 그리고 고대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역사 교과서 및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세 나라 사이에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자국의 영광과 고통을 기억하는 장치는 가지고 있어도 그들로 인하여 이웃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의 태도를 갖는다. 2차대전의 전범을 영웅으로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는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로부터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참배를 하고 있으며, 기념관에는 군국주의의 잔인한 경험들이 영광스러운 역사로 미화되고 관람객에게 숭고한 국가관으로 정신적인 재무장을 하도록 유도한다. 외국의 침략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전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 오직 자랑스러운 승리만이 있었던 과거의 영광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강력히 재생산하고 있다.

세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면서도 서로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자국중심주의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집단적 수준에서의 자세와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행동의 차이를 경험하였을 때이다.

여기에 세 나라의 시민사회의 수준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세 나라는 국가와 민족주의의 틀을 너머선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며 또한 그 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많다. 중국의 중화사상과 패권주의는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가주의와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판국에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의의 강조와 함께 새로운 세대에 의한 탈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는 모순적인 현실이 연출되고 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민주화 운동이 강

력하게 전개되었고 시민운동의 성격도 강하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비정부기구(NGO)의 운동이나 시민운동(civil movement) 단체는 국가주의에 억눌려 있다고 볼 것이다.

총체적으로 이 지역에는 문화의 공통성보다 이질성 혹은 차별성이 더 많이 존재하며 세 나라의 최근세사적인 과정의 차이는 현재의 체제와 제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 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국정 운영 체제에 있어서도 다르다.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헌법에 명시하면서 모든 사회적 제도를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두는 중국은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권력에 대한 선거제도를 실시하는 일본 및 한국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러므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해당 국가들의 공동보조와 상호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에 따라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로 갈수록 글로벌한 시각과 시민사회적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공동체를 향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기성세대는 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경계적 공동체를 향한 시도에서 갈등을 많이 겪게 마련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오늘날의 20대들은 그러한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그들은 가난이나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로서 국가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한 적도 없고 결핍을 이기기 위하여 극기를 하여야 했던 생활철학이나 방식이 없다. 그들은 부모세대가 마련한 풍요와 많은 기회를 향유하면서 성장하였으므로 부모 세대의 의식에 깊이 드리워 있는 민족적 감정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보인다.

중국의 20대는 혁명의 고된 과정도 겪지 않았으며 문화혁명의 고통이나 가난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히려 '한 아이 낳기'를 선도하는 계획생육정책에 따라 소위 소황제(小皇帝)로서 주위의 무한한 축복과 보호와 지원을 향유하면서 자랐다. 그러므로 이들 중국의 20대들은 대단한 배타적

자부심으로 가득차있다. 그들은 거침없이 중화주의를 표현하며 어디를 가나 중국인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만만하며 자기중심적이다. 중일 축구전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이러한 중화주의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한 반감 그리고 역사적 기억으로 인한 국민적 감정이 어떤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배타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국의 일반인들이 일본의 축구팀에 대하여 표현하는 반감은 역사적 기억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 아니라 이들 '작은' 그리고 과거에는 '변방의 조공국'이었던 나라가 중국보다 더 강하다는 점에 대한 혐오감이다. 이러한 반감은 한국 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표출된다.

반면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세 나라 사이에 있었던 과거 역사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으며 심지어 무관심하다. 그들의 모습은 일본의 입장이 난처한 과거사의 부분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역사 교육의 희생이기도 하다. 이들 전후 신세대는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의 과거의 영광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거나 무식하지는 않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교묘한 공존 상황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20대 역시 전쟁과 결핍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들은 서구적 전통과 생활과 취향에 일찍부터 익숙해왔으며 부모 세대들과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부모세대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해 비판적이며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선호가 강하며 국가와 민족의 경계에 대하여 관대한 글로벌리스트의 성향이 강하다. 그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민족과 국가 의식을 강조하거나 반미적 성향을 표출하는 것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은 가끔씩 국가나 민족 감정을 일시적으로 강렬하게 표출하게 만들며 자신들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거스르는 미국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반미주의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상과 이념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맥락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문화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 계산이나 정치적 실리 앞에서 문화의 구속력으로부터 쉽게 스스로를 해방시킬 것임을 강하게 믿고 있다. 한편으로 역사적 기억으로 인한 갈등을 우려하는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시간이 약'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기성세대는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과거는 덮어버리고 또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한 꿈을 노래하지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주장 밑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기억을 하던 세대가 사라지면 자연히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시대 즉 과거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따라서 역사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세대들이 공존을 구가하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주류 세대가 과거와 연결된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는데 비하여 일본의 주류세대는 과거와 단절한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인의 사이에는 감정적인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때때로 더욱 고통스럽게 되살아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논의 자체에 신뢰성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역사관의 불일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세 나라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역사에 대한 기억을 그러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문화적 수단으로서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비록 일본이 역사인식이 약하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회피함으로써 그렇게 보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서로에 대하여 표현하는 반감은 국가 수준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중국침략과 남경대학살 그리고 중경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상처는 아직도 중국인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일본 축구팀과 응원단에 대한 중국 관중들의 폭력적 행위는 단순히 최근의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의 제고에 힘입은 중국인의 중화주의나 외국인 혐오증 혹은 일본에 대한 경쟁과 견제심리의 발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은 이를 중국인의

국제적 상식을 결여한 호전적인 중국 중심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함으로써 일본인에게 애국심이나 경쟁력을 호소한다.[3] 심층적으로 깔려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해결의 노력이 없이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도 각각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호도될 뿐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국민 사이에 벌어지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상호 비난은 세 나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며 동시에 각각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보여준다. 센가쿠섬 또는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대립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역사적 기억의 생산에까지 미친다. 야스쿠니 신사에 수상이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것을 중국과 한국인들이 비난하는 데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다른 각도에서 인식한다. 즉 전범이란 전쟁에서 패한 측이 이긴 측에 의하여 전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정치적 관행의 희생양이지 절대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 그들을 전범으로 사형시킨 것은 점령군 재판부이므로 그 재판의 법적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미 사형된 사람에 대하여 또 다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일본문화 체계에서는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식된다는 점, 그들을 부정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 이래의 근대적 국가로 성장해 온 국가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점 등을 든다. 이상의 내용들은 본인이 서울대학에 유학중인 일본인 학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청취하는 조사 결과이다. 그 중 소수의 학생과 다수의 한국 학생들은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즉 그들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을 살육하고 민간인 지역의 평화를 파괴한 자로서 그 죄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첨예한 대립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젊은 일본인들도 전쟁으로 인하여 치른 파괴와 죽음의 죄악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후회나 반성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일본 사회에서 소위 '좌파'로 분류되

[3] 다카하시 데츠야, "단절의 세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각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4년 10월 25일).

는 소수자이다.

일본에 대하여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를 거칠게 지적하는 중국은 그러나 고구려사의 왜곡행위에서 보듯이 자기중심의 역사변조를 노골적으로 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의 항의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한국의 중국 시장에의 진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통제하려 든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문화적 왜곡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왜곡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소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하여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반응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 계산에 의하여 하도록 유도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움직임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정치와 경제적 협력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한국 측이 문제삼지 않기를 요구하며 한국의 정치가와 기업가와 정부도 이러한 면에 대한 계산에 의하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 지역에서 국가간에 공동체적 유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소위 국세가 증강되면서 더욱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하고 국가간의 경쟁과 긴장 관계를 만드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와 동시에 각국의 사람들이 이전과 달리 실제로 국경을 넘어선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탈경계적 문화의 흐름은 정보, 지식, 생활방식, 소비 스타일 뿐 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유행도 그러하다. 한류(韓流), 일류(日流), 한류(漢流) 등으로 말해지는 유행의 물결은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듯 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즐기고 싶은 것을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즐기게 되었다. 전파매체나 정보산업의 발달, 그리고 교통체계의 발달은 지역 간의 인적 자원의 이동과 움직임을 더욱 쉽게 원활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조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그것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선구자적인 통찰력과 창의적인 추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중심을 향하여 경쟁한다면 더욱 갈등만 커진다. 따라서 문화 소통과 상호존중의 능력은 그러한 정치와 경제적인 공존과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 주위에서는 유럽 공동체(EU)를 모델로 삼음으로써 동북아 공동체가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낙관론을 펴는 경향이 있다. 유럽 공동체는 우리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자극제는 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럽 공동체는 참가국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갈등과 경쟁 그리고 필요성이 혼합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정리하고 마침내 성취시킨 가장 중요한 실천적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문화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계산에 의하여 국가 사이에 이합집산을 하는 예는 언제나 있어 왔다. 그것이 때로는 지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사로 장식되었지만 결국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며 설사 그러한 관계가 지속 된다고 해도 해당 국민들 사이에는 평등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 공동체는 민족 개념이 동아시아에서처럼 연원이 뿌리 깊지 않으며 국가의 전통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았다. 하나의 국가가 국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세력의 불균형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적 전통이 문화적 공통성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의 살상과 파괴와 식민침략적인 문화적 왜곡과 말살의 경험은 없었다. 그러므로 문화적 소통과 이해가 생활화 되어 있어서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바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수십년의 노력 끝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제 국가와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명제를 당위와 필요라는 맥락에서 다짐해야 하며 원대

한 안목에서 문화적 통합이라는 기반 조성부터 착실히 수행해 나갈 역량과 준비를 실천해야 한다.

6.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기본 조건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구체적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 자체가 곧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 과정인 것이다.

가. 문화적 소통

문화적 공유와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과 자세를 배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웃 나라나 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공유하는 문화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소위 문화학습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위의 강화를 위한 일국주의적(一國主義的) 경쟁과 발전의 정책에 앞서서 공동체 구성 국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와 교육이 심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TV와 신문과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관광 교류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직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다양성에 대한 경험적 이해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서 한류나 일류 등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의 소비 열풍을 지원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상품을 향유하는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나. 언어와 문자의 사용 능력

세 나라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상대방의 문자 해독과 언어 사용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등 및 고등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언어와 문자에 대한 학습 및 연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어사용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정책의 실시는 이 지역의 언어 습득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요컨대 영어 의존의 세계화 운동과 지역 언어 습득 교육이 어떻게 상충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서구 우위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지역의 문화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불가피하며 이 지역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의 고양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다. 감정적 거리 좁히기 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이웃 인정하기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자세가 확산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왜곡된 이미지와 거리감 내지는 불신과 혐오감은 이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빚어진 것이며 그 후에는 냉전체제에 의하여 직접적인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관계로 수정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화 운동의 영향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서구의 예에서 찾도록 교육의 내용이 채워졌던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웃과 지역 사회에 적용되는 훌륭한 사람의 교훈적 이야기를 서구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발굴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라.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근감은 중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일어난 과거의 역사가 남긴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다. 이는 올바른 사관과 역사 청산에 대한 용기를 공유할 때 그리하여 윤리와 도덕과 인권에 대한 공동의 개념을 가질 때 가능하다. 식민침략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나 폭력에 대한 은폐를 과감하게 규명하고 인정하는 노력이 고통과 수치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공유로부터 공동의 미래를 생산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의 역사 유적 및 유물을 공동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식하여 보호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지식과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지역 내의 모든 역사유적과 유물은 해당 국가나 민족의 배타적인 독점물이 아니라 그로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되새기는 역사적 의미와 교훈의 원천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특정 국가나 민족의 정당성을 허구적으로 생산하거나 상대방을 폄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파괴하거나 왜곡하거나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역사학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국주의에 의한 '국사'를 넘어선 지역의 '역사'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적절하다.

마. 법적인 장치 보장

문화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다짐은 모두 법으로 뒷받침되고 제도적인 장치에 의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법 조항과 개념을 공통적인 것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 제도는 공동체를 향한 의식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문화적 수단인 것이다.

인권개념, 범죄에 대한 정의와 규제의 방식, 사회와 경제 영역의 법, 법의 개념 체계와 제도가 각각 다르다. 이를 여하히 공통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바. 갈등해결을 위한 장치의 개발

문화 공동체는 조화와 평화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기대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접촉과 교류가 많을수록 갈등의 가능성도 많아진다. 더욱이 세 나라의 국가 체제와 이념적 기반 그리고 국가의 성격과 문화체계의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공동체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갈등적 요소들을 해결할 장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과학 기술의 공유체제 확립

문화란 생활의 기반인 동시에 삶을 향유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 사이에 지식과 과학 기술의 공유를 확산 증대시켜야 한다. 전문 인력 및 연구 기관과 시설 사이에 교류가 원활해지도록 제도적인 조처가 강구되어야 하며 공동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와 새로운 기술이 공개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내의 국가에 따라서 분야별 발전의 정도가 다르므로 상호 보완적이고 역할분담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과학발전 프로젝트들이 협력을 통하여 시도되어야 한다.

기술 공유체계는 또한 새롭게 발명된 지식과 기술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전파 보급하는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적 향상을 누릴 자원에 대한 접근 수단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의 향유에서 국가나 민족 혹은 지역 사이에 불평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일종의 식민지적 구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에는 기술 인력의 훈련과 배양의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술 인력에 대한 공동의 자격 인증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또한 문화산업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과학과 기술 체계의 발전 기반의 확보도 포함한다.

아. 비전의 공유와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비전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그 필요성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자. 차세대 교육

문화의 생산과 실천의 주체는 사람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 주체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의 배양이 필요하다. 이 운동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하여 실천되는 것이므로 미래의 세대들이 어떤 비전과 실천능력과 연대를 갖추는가가 핵심이다. 따라서 차세대 젊은이들로 하여금 동북아 공동체의 구상과 실현의 가능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확립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역사인식의 공유와 이웃 민족과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공통 과정을 개발함은 물론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도록 유학제도를 포함하여 역내(域內) 국제적 교육의 기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차. 공동운명체적 인식의 확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저해가 되는 현재적 문제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나 국가 혹은 민족 집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의 모든 사회와 사람들에게 공히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의 파괴나 환경의 훼손 그리고 공해문제, 기아와 질병과 보건에 관한 문제, 식품과 위생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범죄의 발생과 확산의 문제 등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공동운명체 의식과 공동 규제와 관리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천의 기구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7.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현방안

가. 시민능력의 배양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체의 핵심은 이 지역의 주민들 자신이다. 비록 공동체에 대한 운동의 단초는 이 문제를 깨달은 지식인들이 제공하며 정치와 경제 영역의 엘리트 집단들의 적극적 행동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는 데 실질적인 힘으로써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의 문화 엘리트나 정치적·경제적 엘리트만으로는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공동체 형성의 자생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은 대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대중이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의 구속을 벗어나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하며 관변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으로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으로서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춤으로써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너머선 탈경계적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연대를 확대하고 이 지역의 시민들이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보다 큰 세계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공유하는 교류와 만남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 민간차원의 NGO 활동과 그들의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나 우익 세력이 자국 혹은 자민족 중심의 욕망을 위하여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을 저해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스스로 거르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나. 정부 혹은 국가간의 협력

동북아 지역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가의 권력과 권위가 아주 강하다는 점이다. 소위 국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운동에는 시민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국가의 지원과 정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와 행정관리들의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계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실제로 행정 관료와 입법 의원, 그리고 사법계의 고급관리는 가장 국가체제에 충실하므로 공권력의 차원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가가 포함되는 지역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세련되어야 한다.

정부간의 협정과 협력체계를 통하여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동체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공통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이나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체험캠프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상호 방문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비자협정의 개선을 통한 원활하고 자유로운 방문과 교류 활동의 보장과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아이디어와 시민운동 차원의 문화 활동도 법적인 보장과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그리고 대중문화의 교류와 유통에 관계된 공통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 보호법이나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산업의 유통과 소비시장에 관계되는 법적인 규정이 확립되어야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가능해진다. 아직까지 동북아 여러 나라 사이에는 이러한 문화 영역에서의 법적인 장치가 세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가 간의 법적인 협력체계도 미비한 점이 많다. 또한 국가

마다 각각 법적인 기준과 법규의 적용방식이 다른 데서 혼란과 갈등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문화공동체가 성원들에게 삶의 질을 고양하고 공동 번영의 바탕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면 이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권 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 보건, 위생, 영양, 신체적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공통적인 법체계와 법 집행의 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라. 문화 학습과 소통 능력을 위한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

미래의 세대로 하여금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과 학제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 간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인력 혹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술자격증의 공동 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하여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며 지식과 기술의 수준을 평준화하면서 수준 높은 삶의 조건을 성취하는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에는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법 개념과 인권 개념에 대한 공통의 교육과 훈련 과정이 개설될 필요도 포함한다. 정의와 범죄에 대한 공통의 개념과 규정이 만들어질 때 민사 및 형사 부분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사례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법문화는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다.

마. 문화산업의 공영을 위한 제도

문화산업은 문화체계의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의 공유와 교류가 원활해지고 확산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서 문화산업이 새로운 기존의 산업을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적 수익의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소비는 새로운 세계관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을 즐기는 기회의 대중화 혹은 보편화라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무용, 디지털과 정보산업과 연결된 다양한 새로운 예술의 장르의 생산과 탈국가적 유통 및 소비의 시장을 넓혀야 한다. 동시에 역사유적과 문화유산의 국제적 공동 관리를 위한 제도와 협력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8.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지적한 바, 중국과 일본은 거대하고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체제와 이념적 정향 그리고 추구하는 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상(像)이 너무나 대립적이고 경쟁적이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한국은 세 나라 가운데에서 중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중추적인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사회는 이를 위한 기본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급 및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및 교류가 원활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과학과 기술의 접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새로운 국제교육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컨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이 먼저 그 입지를 확립해야 한다. 동북아 공동체 운동은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탈경계적 세계의 확대를 실천하는 운동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삶의 질과 안전을 확복하기 위하여 세계시민으로 발전하는 운동이다.

동시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공동체적 관심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적으로는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한다. 동북아 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민족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하나이기도 하다.

II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 전략, 전망

전영평(대구대학교 교수)

1.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번영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와 실무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의 동북아 공동체 구상은 대부분 국가간 불평등을 전제로 한 주장이거나, 동북아지역의 배타적 지배의 구실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간 연합을 통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국가경계 중심의 생활환경에 익숙한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미 서유럽과 동유럽 25개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통합을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북미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를 구상하여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실제로 어렵다.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삼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는 원칙적 사안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동북아 공동체가 과연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며, 누가 주도하며, 어떤 명분과 실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북아 공동체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의미가 더 강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익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4] 특히 동북아 3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 상호 반목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념적으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되어 냉전의 대리자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이러한 불안한 역사적 상황은 동북아 3국의 평화 정착

[4] 김광억, "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

은커녕 경제적 협력조차 어렵게 해 왔다. 해방 이후 서구 자본주의에 편입된 한국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래 경제적 관계를 활성화 시켜왔으나 정치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갈등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식 개방정책이 도입되고 한국과의 수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잘 유지한 관계로 이제는 경제적 분야에서 서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 이념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거래관계 이외의 분야에서 그 성과가 크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침략에 대한 국가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반성이 매우 미흡하고, 2차 대전 당시 전범에 대한 연속된 참배 강행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단지, 일본은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 중국과 매우 건조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동북아 삼국의 협동이 각 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상호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엄연한 판단이 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6] 그러나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구상이 단지 경제 협력 공동체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경제 관계의 속성상 불평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갈등의 소지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 행위와 문명

---

[5]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카하시(2004:218)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하여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19세기 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발생한 동북아시아 각국간의 대립, 단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최대 과제로서 "첫째, 과거에 일본제국이 조선반도나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나 군사점령을 하여 커다란 피해를 주었음에도 패전 후 일본이 그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그 단절을 극복하지 않고 있는 채 다시 역사교과서 및 역사인식문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카하시 데츠야, "단절의 세기를 넘어서," p. 218.

[6] 김명섭도 "현실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의 실익이 매우 클 것 이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 구성의 구체적인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역내 주요국가들 사이의 정치 안보적 이견이 크고, 그 밖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요인이 지역에 있어서 역내 협력과 지역공동체 구성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김명섭,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통일연구원 발표자료, 2004년 11월 25일).

형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동북아 삼국의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의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①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②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의미, 기대효과, 범위, 효과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며, ③ 동북아문화공동체 추진의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동북아 문화공동체 논의의 위상과 성격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권의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사상을 토대로 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첫째, 과거 동북아의 상황이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 국면에 처해 있었던 관계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 둘째, 동북아 국가 간에 지리적, 문화적, 제도적 소통이 거의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 문화 접촉을 통한 상호 관계 발전을 거의 기대하기 힘들었다는 점, 셋째,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양국간 문화 소통은 금기시 된 가운데 서구와의 문화적 소통이 일방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상호 문화에 대한 수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자국 문화중심주의 사상이 워낙 강한 데다 최근 서구화의 열풍에 휩싸이게 되어 다른 동북아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인하는 바 크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세계화, 정보통신 혁명, 교통혁명이라는 새로운 삶의 환경이 조성되고, 동북아 3국의 경제 협력이 상호 번영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동북아 삼국은 문화적 소통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간 문화적 협력은 문화라는 개념이 갖는 추상성과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학, 스포츠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문화교류 분야뿐만 아

니라 지식, 학문, 제도, 관습, 역사, 지리, 행정, 여성, 복지, 교육, 드라마, 방송, 언론, NGO, 청소년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의 정신적 교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국가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신적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21세기 들어 동북아 3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다소 불안한 가운데 진행되기는 하지만 동북아 3국의 화해 협력 분위기가 고양됨에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은 각자 나름대로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큰 흐름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잘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본 수상의 2차대전 전범 참배가 한국과 중국의 해묵은 감정을 건드리고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 때문에 삼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은 보다 보편적인 구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에 부는 한류 열풍과 한국 젊은 세대의 일본 문화 추종 현상은 크게 우려할 걱정거리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 신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게 될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동북아 삼국의 협력이 시대적 요청이고 상호 번영의 길이라는 점이 삼국의 국민들 간에 확실한 신념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크고, 문화적 교류 협력이 갖는 우호적 정서가 잘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나 신사참배 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들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그 해결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보면 삼국의 협력은 과거사 청산에 얽매여 있으며, 서로의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단계에 있으므로 중립적인 영역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경제 협력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립적인 하부구조인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 증가는 결코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그 상부구조인 정치, 문화 부분의 교류를 증진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제도와 정신 분야를 포함하는 문화 교류 부문의

소통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문화와 한국문화는 동북아 삼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제 교류의 흐름을 타고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삼국의 정치가들이 기획하거나 지식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현지 진출의 부수적 효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북아 삼국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은 결국 동북아 삼국간의 경제 교류의 증진을 토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동북아 정치 경제에 대한 과거의 수많은 토론이 그 결실을 거의 거두지 못한 것은 동북아 국가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데 기인하지만, 최근의 동북아 관계 개선 움직임은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내실화, 정치적 안정, 세계화, 유럽연합의 통합 등과 같은 국내외적 요인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동북아 3국을 둘러싼 이러한 환경 변화 국면은 경제교류의 영역을 넘어 문화의 영역에 이르는 상호 소통과 협력의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화적 소통의 주인공은 민간 영역과 개인이 담당해야 하게 되겠지만, 3국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국가의 역할은 민간 분야의 문화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과 자원을 마련하는 일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 부문 – 기업, NGO, 시민 – 들의 진출만으로는 성취되기 힘든 영역 – 국제 교류를 위한 제도 와 관행의 개선 – 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동북아 문화공동체형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 행정적 차이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와 문제점을 먼저 인식한 국가의 제의에 따라 동북아 삼국 정부 차원의 실질적 협동 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협동 구도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상의 내용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비전 제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전략 추진 체계로서의 동북아

문화네트워크 및 동북아 문화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국내 차원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은 한국 정부 기관 중에서도 - 특히 삼국간 오해(한국의 문화지배전략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 인문사회연구회와 같은 지식 Think Tank 관리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비전

동북아 문화공동체구상은 동북아국가의 협력적 정서와 선의의 경쟁 요구를 조성하여 한국은 물론 동북아를 세계적인 문화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실익의 측면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은 각자 수준 있는 고유한 문화 영역을 토대로 상호협력을 통한 윈-윈(win-win)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적 협력은 인간사회의 바람직한 질서와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높은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자기 발전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달리 상호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지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수용력은 더욱 커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한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프로젝트는 국내적으로는 고품질 문화가치 형성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문화혁신운동을 통하여 형성된 고급문화 가치를 동북아 국가들과 공유하여 동북아가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동북아 지역의 갈등은 군비 증가 및 상호 불신을 초래하여 동북아 지역

이 지속적으로 세계적 불안 지역으로 남게 할 것이며, 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의 삶의 방식을 공유함으로서 동북아 지역 평화 정착의 반석을 형성하는 일은 분명히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삶의 공유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은 물론 다른 공동체 및 국가와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동북아 문화가치 창출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삼국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 교류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문화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동북아 지역의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는 경쟁력을 가진 문화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거의 없다. 근세에 들어 외세의 침략에 의해 서구적 문화 가치가 유입되고 이를 추종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지역의 문화는 자타가 서로 무시하는 가운데 구태의연하고 비속한 것으로 왜곡되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문화권의 저력은 서구문명자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화의 창조력과 우수성을 추가하여 새롭고 수준 높은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유럽연합 등 세계적 지역 공동체를 압도할 수 있는 고 품질의 문화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공동체 건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선린 관계를 형성하여 다시는 침략과 보복, 억압과 저항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문화가치의 산출하겠다는 것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

화와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동질적 문화를 토대로 한 공동체의 형성 노력이 요청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당연히 상호 번영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기대효과, 범위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 시대에 나타나는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7]

동북아는 세계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지역이면서도 경제규모가 세계 무역의 30%를 상회하는 지역이다. 동북아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가치관과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이 매우 유사한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견고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세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냉전 상황에서의 국제적 분열, 한반도의 분단 등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는 최근까지 상호 긴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게다가 여전히 폐쇄된 체제 안에서 주변국에 대한 불신에 갇힌 북한의 처신과 미국의 견제 사이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7] 전영평・박경하,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최송화・권영설 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pp. 36~37.

협력 관계는 자신들의 운명을 바람직하게 주도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작업을 창도하는 일은 동북아 3국 및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동북아 평화는 물론 상호 번영에 분명히 큰 기여를 할 것을 보인다. 헌팅톤도 지적한 바 있듯이 문명의 충돌보다는 문명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문명간 대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때, 우리는 문화간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화합과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의 조성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역사적으로 확보된 문화적 공통성의 기반 위에 각 나라의 문화적 개성을 유럽 대륙 차원에서 다양하게 발휘하도록 이해와 관용의 장을 마련한 것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통합에 큰 기여를 하였다. 헌팅턴의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었을 때 경제통합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의미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경제는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다"라는 언급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향후 가져올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데 충분하다.

나.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긍정적 효과

동북아 국가들은 근세에 들어 불행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역사는 동북아 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이 우리의 운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리라는 자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불행하게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외시한 채 제국주의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더 강했다. 이 때문에 기왕의 문화적 공통성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동북아 국가들 모두가 비극으로 내몰렸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지난 50년간 제2차 세계 대전에 승리한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 나갈 동안 중국, 일본, 한국

은 이념의 좌우와 경제의 득실로 나뉘어 상호 질시와 갈등의 나날을 보냈다. 이런 와중에서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합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데 성공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국가연합 형성을 통하여 세계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미지역과 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정치, 경제 연합을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동북아 3국은 변변한 지역 통합체 하나도 결성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주도의 발전 계획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돌파하고 동북아 삼국이 평화를 바탕으로 상호 번영하는 길을 찾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일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 국가 중 가장 피해가 많은 한국이 동북아의 문화 동질성을 기초로 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대외적 명분 확립과 동시에 대내적 문화 혁신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의 수립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지역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지역의 문화 공동체 추진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신적 초석이 구축될 수 있다.

둘째, 동북아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용서와 관용, 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공동체 형성 노력은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실질적 교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 화해, 협력,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경제중심은 일국 중심의 발전 계획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치열한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는 발전주의 선언보다는 동북아가 문화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각국에 고품질의 문화적 혁신이 일어나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혁신을 위한 국가적 전략 구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한 대중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는 문화산업이 상호 교류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국가간 상호 이익과 협력의 좋은 기반이 된다.

다섯째,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국가의 집단적 문화 혁신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과 각국의 국내적 문화 혁신을 동시에 수반하는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의 합의에 의한 상호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과 범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지형을 고려할 때 넓게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몽골, 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좁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문화지형을 고려할 경우 문화적 동질성에 따라 한정된 국가만을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문화적 이질성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의 선택도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구상이 종래의 일상적인 국가간 문화협력 및 교류 행사 수준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 국가의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국가를 동북아 주요 경제 교류권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며 둘째, 전략적 특성에 따른 문화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동북아 경제교류 안이 상정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 러시아에 관한 입장은 모호함 - 인데 이러한 범주 선택의 기저에는 3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세계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추진과의 보조를 맞출 경우 전략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 중추(hub)가 된다는 3국 협동 전략으

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동북아 경제 교류권과 동일한 국가 군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화공동체 형성 작업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전략적 선택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통해서 공동체 참여 구성 국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 및 지식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에 정보와 지식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 - 일본, 중국, 한국 - 들을 문화 hub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5.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국의 역할

가.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시대」의 구상이 국정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의 거의 절반가량이 동북아시대의 구상에 관한 것이며, 연설 내용 전반을 꿰뚫는 코드도 단연 동북아시대였다. 취임사에 나타난 "동북아중심", "동북아시대", "번영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국정 운영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는 데는 충분하였다.

>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

> 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노대통령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취임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 - 20대 과제 - 에서 6번째 과제로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동북아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②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의 창설 및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③ 동북아 철도공사의 설립, ④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⑤ 동북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강화, 동북아 표준화 사업 주도, ⑥ 인천, 부산, 광양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hub) 기지 개발을 제시한 바 있다(노무현 공약집 자료). 또한 노무현 후보는 8대 핵심전략 중 8번째로 한반도의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 다른 공약에 비해 덜 중요한 순위에 있었으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각별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사회발전」과 더불어 3대 국정 목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은 12대 국정 과제로서 설정되었으며, 지난 2003년 4월 16일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를 구성하여 경제 분야로부터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이라는 과제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 학술세미나, 정책과제 수행 등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구상을 수정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로 변경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동북아시대의 구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

나. 동북아시대 구상의 한계와 동북아문화공동체

그런데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에서는 - 특히 초기 1년 동안에는 동북아 문화협력이나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같은 정책은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실제로 참여 정부의 동북아정책은 대부분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그러나 동북아 경제중심의 구상도 문화적 협력 인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8] 거래관계 및 이윤추구 중심의 관계는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경우 지속되기 힘든 반면, 문화적 교류관계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진된 상호이해를 통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의 내용이 수월성을 갖출 경우 문화가 갖는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시민사회가 동북아시민

---

[8]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최근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경제.화폐를 통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U 역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EU를 이루는 데 공헌한 장 모네는 정치가나 외교관이 아니라 코냑 상인이었다. 전쟁을 억제하는 데 교역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한·중·일 간의 화폐통합은 동아시아 지역의 대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바(『중앙일보』, 2004년 11월 16일) 이러한 경제적 교역 방식의 변화가 동북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같은 일국 선언적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경제통합 방식의 평화 유지에도 기여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문화와 인문영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포럼을 창립하고 그 선언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글로벌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침략과 저항, 반목과 오해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물론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구상이 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결되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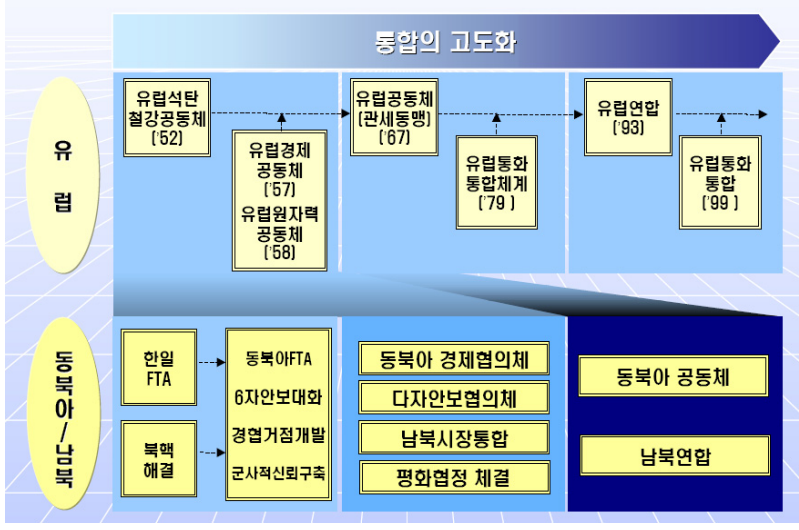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회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동북아중심은 경제중심은 물론 인문사회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경제중심의 구축은 공동체 문화기반을 바탕으로 촉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는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이 높은 ‘작지만 강한’ 국가들(싱가폴,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은 문화축적과 창조적 지식기반의 구축을 통한 국가발전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분야의 창조적 역량과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지식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정부의 12대 과제 – 비록 동북아시대 구상과 관련된 과제는 아니지만 – 중 「지식문화강국 실현」의 사상과도 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것이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지식문화강국 계획이 국내라는 지형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분히 문화산업, 기술인력개발, 문화유통시장을 주요 컨셉으로 하는 경제성 확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 창달의 수단으로 문화산업 및 문화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시대의 문화교류를 염두에 둘 경우에는 문화정책은 보다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포함해야 하며, 문화의 전파와 확산의 방식도 공동체구성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추진 계획 고찰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추진 구상은 거시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동북아 통합시계), 이를 위한 동북아 공동체 건설의 전략과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의 구상의 특성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상호 번영과, 이를 발전시킨 형태의 상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이익의 추구 과정은 상호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 중심적 상호 이익 추구가 평화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이외의 다른 요소, 즉 상호 이해를 문화적 요소의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작업이 선행 혹은 병행 될 필요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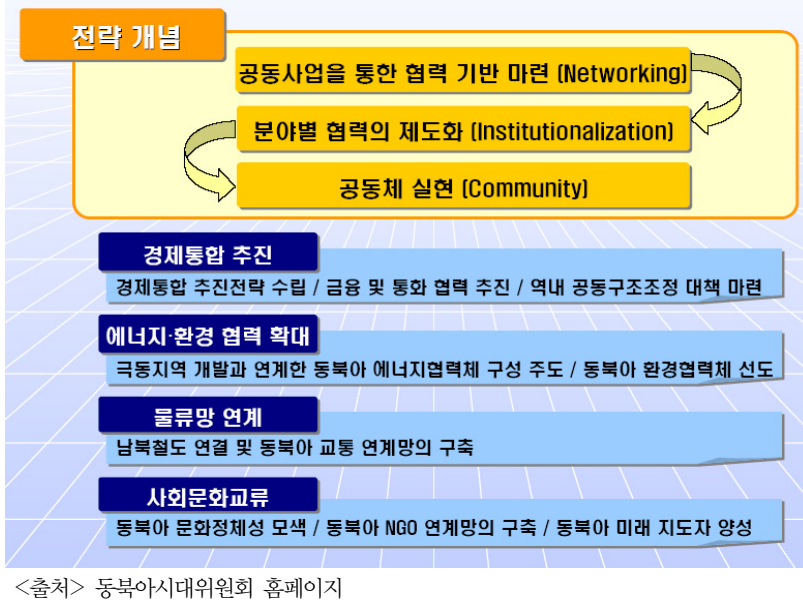
다행인 것은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 분야를 보면 사회문화교류 분야가 있어 그 세부과제로 ① 동북아 문화정체성 모색, ② 동북아 NGO 연계망 구축, ③ 동북아 미래 지도자 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거의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문화교류에 적합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태까지 동북아문화를 주제로 한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이 공식적으로 개최된 바도 없으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Ⅱ-1> 동북아의 '통합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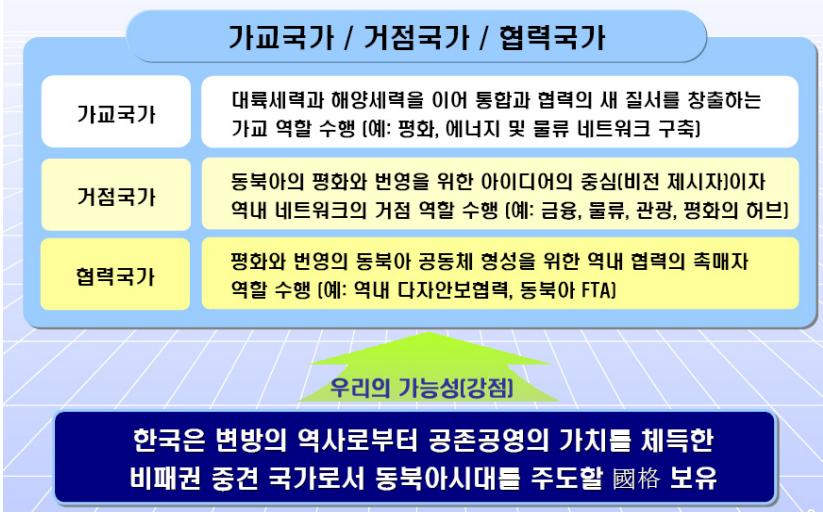
<출처>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Ⅱ-2> 동북아 공동체 건설



<출처>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Ⅱ-3> 한국의 역할



<출처>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근본적으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동북아시대 구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 국가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의 상호이해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연구는 동북아삼국의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국가정책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권고하며, 이러한 작업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언론 및 일반 시민들의 지극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작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식한 지식인과 정책 연구가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비전, 추진체계, 한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6.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전략 구상

가. 협력의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사안이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이 연구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큰 틀에서 체계화하면서 가능한 전략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크게 동북아 국가와의 공동작업 부분과 국내작업 부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은 참여 국가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과 논리의 개발, 상호 명분과 이익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문화 hub 구상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3국이 중추가 되는 문화공동체 구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 중, 일 3국이 동북아 문화혁신 hub가 되어 동북아문화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EU 등 다른 세계지역 블록과의 문화협력 및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커다란 구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동북아 문화혁신 클러스터의 외관이 갖추어 질 수 있을 때까지의 역할은 동북아구상을 제안한 바 있는 한국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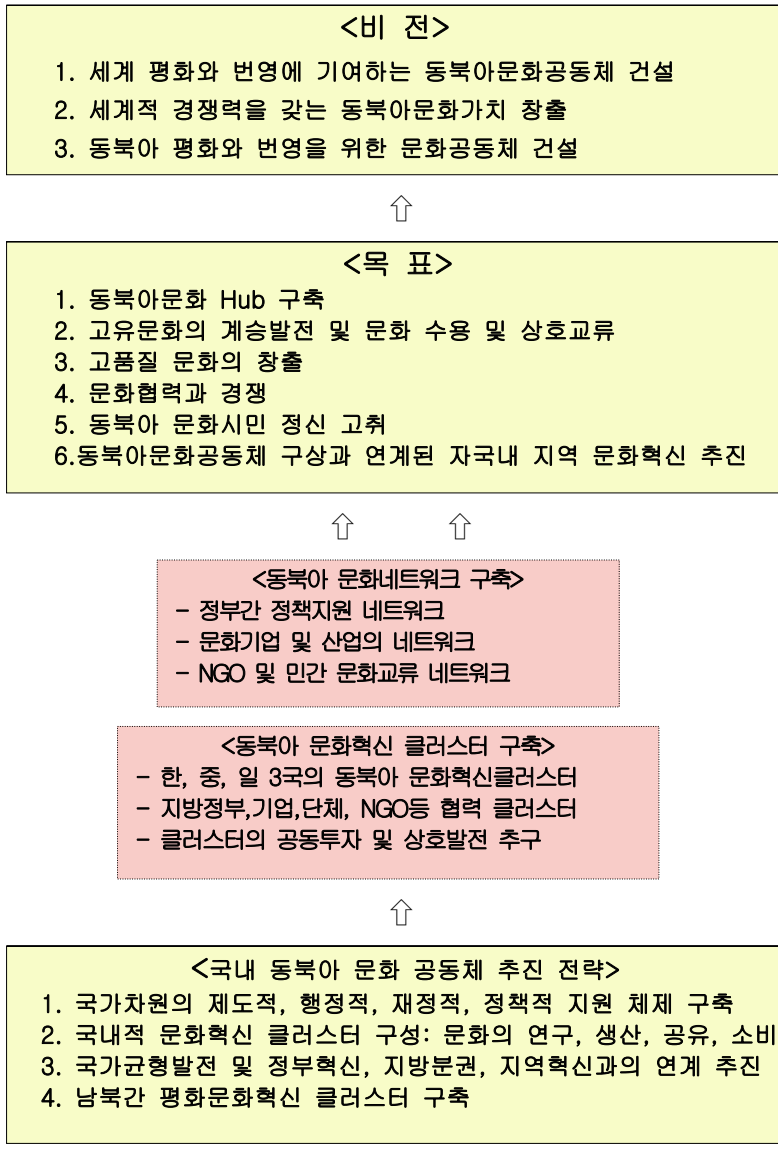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국내적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목표와 대안 마련에 치중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 내에서 품질경쟁력을 갖는 문화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으로는 국내의 주요 대학, 산업, 문화인 등이 결합된 '국내 문화혁신 클러스터'를 조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에 모여 있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긴밀한 상호관련을

갖는 클러스터가 발달하게 되면 경제성은 물론 정보와 지식의 전파효과가 커지게 된다.

한·중·일 삼국을 문화공동체의 공동주역으로 하고,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세계화 시대의 문화 hub로 설정하는 방식은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문화 hub는 특정국가의 특정 지역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각자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를 hub로 지정하되, 각 hub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동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참여 국가들은 각자 문화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내도시와 기업,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문화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고품질의 문화 창출 노력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질적인 내용이 결국은 각국의 문화 인프라의 구축에 의존한다는 평범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 문화혁신 클러스터의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이 앞으로 각국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거시적 구도를 토대로 연구자는 향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Ⅱ-4>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협력 틀과 전략적 추진체계



나.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국가 의제화와 실행기구 형성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이 국가적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즉 참여 정부의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국가적 사업으로 선택하고 이를 경제적 사안과 동등한 위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자국의 중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국가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사상이기 때문에 한, 중, 일 삼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기업인, 언론인,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민간 차원에서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역할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실천을 위한 정책적 기획, 재원 마련, 제도의 형성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의 문화 교류와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동북아 문화혁신 클러스터 구축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체계를 작성하고 전략적 과제 도출의 기준 혹은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모색하며, 정부 부서별 문화공동체 관련 국가의제를 발굴하고, 문화 관련 정책의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 개발

(1)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의미와 전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이 참여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구성의 당위성과 유용성은 향후 중요한 정책과제로서의

위상을 정당화해 주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공동체 구상은 지금부터라도 구체화를 위한 논의와 정책구상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여타 정부기관에 앞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한국의 인문사회연구회이다. 한국의 인문사회연구회는 그 산하에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교육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의 인력과 업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창의적이며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할 경우 국가 발전을 위한 커다란 기여와 동시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협력틀의 구상과 전략적 추진체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주제를 각자의 성격에 맞는 정책적인 연구로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제도 정비는 법제연구원이 수행하고, 동북아문화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정부간 정책지원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동북아 범죄문화의 연구는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인문사회연구회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거시적 비전과 목표, 국가간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주도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지역간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다. 여성개발원의 경우 동북아국가 및 국내의 여성과 남성간의 문화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혁신 클러스터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클러스터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hub화를 위한 정책구상과 아울러, 이를 지지하기 위한 국내적 문

화 혁신 정책 구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과 아울러 국내의 문화혁신을 동북아의 문화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점을 가진 구상이기 때문에, 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각 연구소들에게 풍부한 정책 연구 소재를 제공하는 '지식・문화의 바다'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 실천을 위한 연구과제 설정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이 갖는 중요성과 유용성은 국가적 정책과제 개발로 이어질 때 그 생명력을 갖는다. 당연히 국가 주요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Think Tank인 국책연구기관들은 문화공동체 구상의 실천과제 개발을 통해 연구소의 외연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소 단위로는 거시적 국가 정책의 수립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9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 조직인 인문사회연구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은 특정 정권의 주문 차원이 아닌 주체적인 기회의 선택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저품질 문화를 혁신하여 고품질 선진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추진되는 시대라는 점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사회연구회의 작업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젝트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연구회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논의 전개와 산하 국책연구소의 협력은 2003년도 6월 초에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각 연구소 별로 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즉, 동북아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는 ①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 협력 방안, ② 동북아 공동체 범죄 예방 전략, ③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정책간 교류 협력, ④ 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동북아국가 상호이해, ⑤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⑥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⑦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성인적자원교류, ⑧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⑨ 동북아 평화공

동체 건설을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 ⑩ 동북아의 동양적 가치와 문화적 동질성 추진, ⑪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산업 교류, ⑫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 교류 전략 등으로 제시되었다.

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협동연구사업은 현재까지는 기초 논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향후 보다 심층적인 담론과 성찰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책과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계획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계획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제와 밀접하고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현재 경제사회연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정책 분야는 ①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② 동북아 항만허브화 전략, ③ 동북아 금융중심지화 전략, ④ 동북아 에너지협력 전략, ⑤ 동북아 정보통신허브화 전략, ⑥ 동북아 교통망 구축 전략, ⑦ 동북아 자유무역허브화 전략, ⑧ 동북아 산업협력 전략, ⑨ 동북아 농업협력 전략, ⑩ 동북아 환경협력 전략, ⑪ 동북아 지역협력 전략, ⑫ 동북아 노동협력 전략, ⑬ 동북아 R&D 허브구축 방안, ⑭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 ⑮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개발 주제들은 주로 한국을 경제 기지화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하거나 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 주제들은 나름대로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비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 시대에 이미 돌입하였으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패권주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으로 볼 때 일본과 중국을 리드할 수 있는 경제 중심을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전략은 경제일변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동북아의 문화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문화 다양성의 확산, 문화 고품질화 운동과 연계되어 진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사회연구회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와 경제사회연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간의 상호연결성 강화 논의와 동북아문화 및 경제 중심국가 형성을 위한 공동 전략 개발의 담론이 이제 곧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동북아 공동체의 문화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모임인 유럽연합(EU)도 현재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블록이 되는 데 6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구성원리가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복지 등에서 기본적인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북아 공동체의 향후 실천 방안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한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계획은 시간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을, 지형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9] 또한 전략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전 세계적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동북아 국가간 상호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국가 군을 문화 hub로 활용하는 전략과 아울러 국내 문화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원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9] 김명섭(2004)은 동북아시대의 공동체 형성 논의를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로 구분하면서 "현실적으로 유산으로서의 공동체 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총량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에서는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 회복과 활용이 중요하다.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이 분할과 봉쇄였다면, 현재 새로운 시대의 핵심어는 협력과 통합이다. 따라서 과거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공통성과 보편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 구성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연구의 주장과 잘 일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건설 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남북 간의 문화공동체 및 문화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이다. 동북아에 관련된 어떠한 정책 주제도 남북한의 극한적 대립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매우 커도 문화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현실을 볼 때 문화적 주제 선택을 통한 고급문화 가치 형성을 위한 노력은 협동과 상호 존중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이다.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적 공동체의식회복과 문화가치의 상호 경쟁을 통해 고급 품질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문화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제사회연구회. 『동북아중심국가건설연구』. 2003.

김광억. 「동북아문화공동체 토론문」. 2003.

_____. "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 최송화 · 권영설 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김명섭.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통일연구원 발표자료, 2004년 11월 25일.

김석진. "동북아중심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LG주간경제』. 11-17. 2003.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공약집』. 2002.

다카하시 데츠야. "단절의 세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覺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4년 10월 25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활동계획(안)」. 2002.

동북아시대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www.nabh.go.kr/warp/app/home/kr_home

『동북아시민사회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2003.

인문사회연구회. 「동북아중심형성을 인문사회분야 정책과제(안)」. 2003.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이원덕 역.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서울: 일조각, 2004.

전영평 · 박경하.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최송화 · 권영설 편,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헌팅톤. 『문명의 충돌』. 서울: 김샘사, 2003.

Anderson, Benedict. *The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83.

Cohen, Anthony.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Tavistock, 19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헌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 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헌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1, No. 1 (2002)	8,5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1, No. 2 (200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9,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헌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써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절

취

선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